

기업 본사 이전 세액공제 비수도권 내 '쏠림' 심각

4년간 본사 이전 세액공제액 제주·경남 등에 돌아가

전북은 0%에 그쳐… 호남권 본사 이전 성적 저조

한병도 의원 "호남 등 낙후지역 투자 여건 개선해야"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 중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 혜택의 지역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을 통해 지난 4년간(2019~2022) 1조 8,13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다.

하지만, 이중 42.7%인 3,474억원이



제주에, 31.6%인 5,722억원이 경남에, 9.0%인 1,742억원이 부산에 돌아가는 등 극심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와 부산·경남권의 본사 이전 공제액은 전체의 88.8%에 달했다.

이외에도 경북이 1,045억원으로

5.8% 충남이 956억원으로 5.3%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북은 18억원으로 0%대를 기록하고 전남도 2%대에 그치는 등 특히 호남권의 본사 이전 성적은 저조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병도 의원실은 국세청에 공장 지방 이전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도착지(이전지역) 기준으로 세액공제 제공현황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별도로 이전지역별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병도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 인프라가 잘 발달된 특정 지역에만 쏠리고 있다"며 "호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SOC 투자와 강화된 세제 혜택 적용으로, 지역간 협력한 투자여건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산=이재춘 기자

도의회 농산경위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개최

전북도의회 농신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농업·경제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전북도 방위산업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북은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전라북도 방위산업의 혁신플러스터 구축 방안과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작물 생산에 대한 적·간접적인 영향으로 받는 농업 분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 농정 방향에 대해 지문위원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나인권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의정 및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농신업경제위원회는 17일 전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방문해 주요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 농산경위, 현장의정활동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방문

전북도의회 농신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7일 전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방문하여 주요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전에 방문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1월에 개관하였고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현황을 청취한 나인권 위원장(김제 1)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사회적경제의 거점공간인 민족 사회적경제 조조과 기업을 접목하여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도내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전라북도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구 의원(군산 2)은 "자동차융합기술은 세계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외부 변화를 위기에서 기회로 삼고자 전주기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이나 전기차 플러스터 조성과 같은 국가사업을 밀집하여 전환 경·미래차산업 전환에 각별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김진표 국회의장, 제12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환영"

김성주 민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단순 의사 수만 늘려서는

성형외과 등에 몰려들어… 필수·공공·지역 의사 부족할 것"

당 해법으로 "국립 보건의료전문대·지역의사제 동시 추진"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등록 의사 13만 명 중 4만여명이

성형외과에서 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이날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 성형외과·파부과에 더 몰려들고 둘째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점차 필요한 필수·공공·지역 의사들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인 2020년 8월 민

주당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씩 늘리되 이 중 100명은 비이오 분야와 기초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채웠다고 했다"며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이 세가지가 정책 패키지로 묶여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압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빌의해 복지와 교육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민주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와 둘째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재훈 기자

"한은 전북, 지역경제 살리기 투자 촉진 나서야"

민주 양경숙 의원



전북의 실물경제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촉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전북의 제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022년 4분기 -0.6%, 2023년 1분기

-3.9%, 2분기 -3.5%를 기록했고 수출도 2022년 4분기 -11.2%, 2023년 1분기 -14.4%, 2분기 -8.0%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 7~8월에는 제조업생산은 8% 감소했고 수출은 무려

168%나 급감하는 등 그야말로 점점 악화될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자수도 7~8월 들어 전년동기대비 8,000명이나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으로 중국 수출 부진과 무역역 조의 심화가 전북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타개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위상이 갖춰지는 만큼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면서 한은 전북본부가 투자촉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라거의 반전 Kelly

덴마크 프리미엄 맥아 100%
더블 숙성라거

